

한국사회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시리즈<2>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가능한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블록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I. 문제제기

90년대 세계경제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경제의 블록화추세이다. 서유럽의 경우, EC통합에 의한 단일시장의 확립이 1992년으로 등사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도 EC통합과 같은 단일시장의 확립은 아닐지라도 미일중심으로 하여 2국간 자유무역협정 지대의 창설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져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제국, 특히 일본, 아시아 NICS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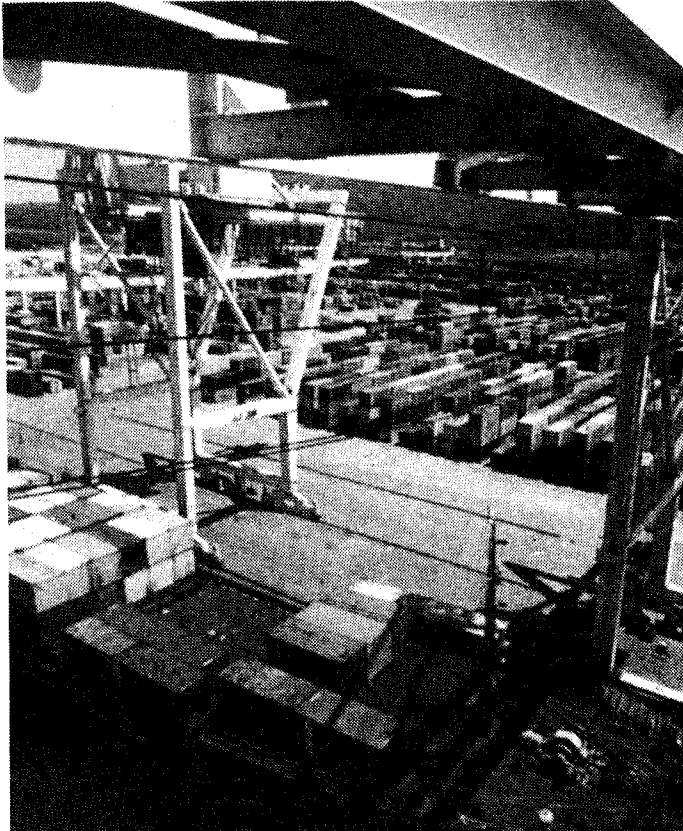
세계경제가 블록화추세로 치닫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이러한 블록화추세를 장기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즉 7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적 과잉생산공황과 이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생산력적 기초로서의 과학기술혁명의 결과, 미국의 산업구조는 지식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GATT체제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협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선진제국간 뿐만 아니라, 선진제국과 발전도상국사이에도 다자간협상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70년대 일시적으로 추종했던, 단일시장창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최종적인 작업이 실시되게 된다. 1985년에는 EC위원회가 1992년 단일시장의 확립을 위한 백서를 제출하였으며 로마조약을 개정·보강한 단일의정서가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에 발효되었던 단일의정서에는 기구개혁에 관한 규정, 국내시장통합을 위한 합의, EC 정책영역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1992년 EC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점은 바로 정책결정에 관한 규정이다. EC의 사실상 정책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ECO사회에서의 표결방식이 개정되어 전원 일치제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서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통합에 있어서 결렬들이 되었던 제반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어 EC 통합은 보다 급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EC통합이 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첨단산업, 예를 들면 정보 통신, 금융 기타 서비스

를 함으로써 쌍무적 협상에 의한 통상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정권에서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서부터였다. 1983년은 미국이 카리브해제국 경제부흥법을 실시하였는데, 미국은 여기서 이들제국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조치와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비록 이 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쌍무적인 협상을 통한 차별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EC통합이 아직 내부적인 문제의 조정과정에 있어 제3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EC가 제3국에 대해 보다 차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경우, 세계시장은 더욱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블록화 될 가능성이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자신의 최종



자본가와 정부측은 어떤 입장이든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 내지 부패정부를 다른 부분으로 전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선진제국간 지역주의 대두, 불균등 발전이 원인 자본주의 세계경제 편승기도 내적모순 심화시켜

II. 제국주의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와 EC통합

EC통합의 단초는 이미 30여년 전에 마련되었다. 유럽공동체창설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은 1957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 공동체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EC통합 과정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면서 경쟁에 대한 요인도 별로 없었다. 이것은 서유럽경제의 대외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장기적인 투자율의 저하는 최첨단 산업에서의 설비부자의 부진과 설비의 내구연소의 장기화를 더욱 촉진하여 최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서유럽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선진제국간의 불균등발전은 EC로 하여금 단일시장의 창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

스업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지지 않기 위한 서유럽의 자구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EC가 겉으로 GATT체제의 준수 등을 내세워 세계교역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EC의 제3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폐쇄적으로 나올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다자간협상을 성공리에 달성함으로써 현재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보 통신 서비스, 금융 등 일부 첨단산업에서 확보한 우위를 누리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다자간협상 그 자체가 아니고는 제반문제점들로 인해 그 성취 자체가 대단히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미국이 실속없는 다자간협상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완벽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무기를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EC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이에 대해 더욱

목표인 다자간협상의 완성을 위해 중간조치로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중간조치가 바로 쌍무적협상에 의한 자유무역협정 지대의 창설이다.

즉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다자간협상을 관철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체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대신 미국과 자유무역 지대의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권은 물론이거니와 자본주의권 내에서 또한 하나의 블록으로 등장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정부측은 미국과 다른 선진제국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선진제국 내부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우 밀접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노동자의 실업의 누적을 초래하여 이들제국 내에서 실업의 문제는 이전 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둘째, EC통합을 대비하여 선진제국간의 상호투자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잉생산공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이전 보다 훨씬 커졌다. 미국의 경우만을 보면, 80년대 초반 이후 호황은 재정적자 무역적자 가 계속지적지라는 세가지 적자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무역적자적자는 미국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현재에서 여러국적의 자본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은 주로 소비내구재들인데, 이제까지는 소비재공급에 의한 가격적 지배에 의해 흡수되는 데에는 한계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대 세계경제에서 과잉생산 공

황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와 같은 세계경제적 조건 하에 있는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 축적의 활로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자본주의 이러한 활로의 모색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외세에 내맡기는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틀림 없다.

전 창 환
<고대 박사과정-경제학>

할 것으로 예상되는 EC단일시장의 형성에 대비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IV.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과 자유무역협정 지대의 체결요구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거한 시장개방요구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요구에 대해 한국의 자본과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전전긍긍에 의한 확대균형전략으로 집약된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업구조속에서 한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부문과 일부 기술부문의 수출을 담당하는 것으로 위치지워져 있다.

이상과 같은 조건 하에서 한국은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한국의 고도성장을 추종해 온 일본 전통적 중화학공업부문의 수출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축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면개방에 의한 확대균형전략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농업 등 일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현재의 자본과 국가의 성격으로 보아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미국의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개발하게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대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자본축과 정부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우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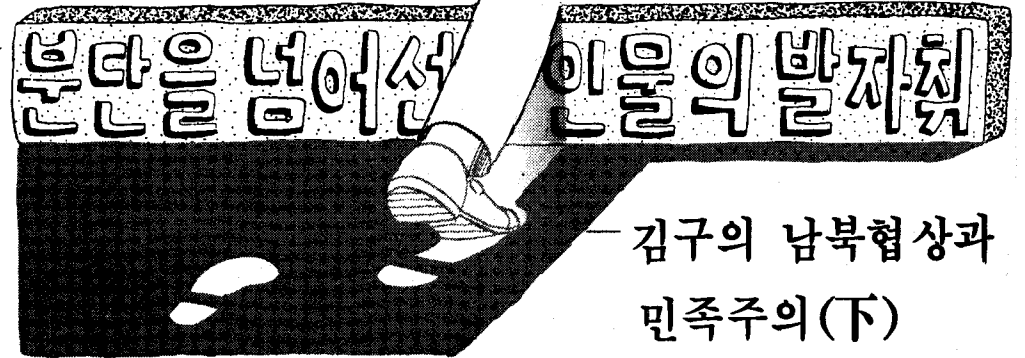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방이데올로기를 창출함과 동시에 미국의 통상압력을 과대하게 선전하게 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양보(실제로는 불평등한 이데올로기공세를 통한 자본의 노동에 대한 포섭)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자본 경제위기가 유보되었을 때에도 바로 미국 등 선진제국의 시장개방 및 통상압력이 이들이 내세우는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정부측은 미국과 다른 선진제국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선진제국 내부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우 밀접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노동자의 실업의 누적을 초래하여 이들제국 내에서 실업의 문제는 이전 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둘째, EC통합을 대비하여 선진제국간의 상호투자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잉생산공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주의(下)

3월 12일에는 통일독립담상을 위한 이승만을 제외한 민족지도자 77인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과 한민당은 UN 소총회 결의에 의한 5.10 단독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들은 백범의 남북협상을 왜곡하고 비난하고 모략중상을 일삼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여 백범은 3월 21일 신민일보 사장과 단독담담에서 소신을 더욱 굳세게 천명하고 "우리는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이냐 사도이냐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대의명분과 남북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생활을 30여년이나 한 것을 가장 비현실적인 길인 줄 알면서도 민족의 자살명령이므로 그 길을 택한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독립운동 재출발의 새로운 결심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4월 14일에는 문화인이 총망라하여 108인이 연서로써 남북협상 지지성명이 나오게 되고, 그후에 "조국은 조국의 길이다" "예속의 길이다" 또는 "통일의 길이다" 하는 분수령상의 절정에 서 있다"라고 시작하여 "민족대의의 명분과 국가존 존의 정도를 밝히어 진정한 민족적 자주독립의 올바른 운동을 성원코저 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백범은 북행의 길을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의 건국사업은 최대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금에 와서는 죽거나 살거나 우리민족의 자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UN이 아무리 사주하여 단정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 손민대에 전할 수 있는 장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피와 언어와 조상과 도덕을 가진 조선민족끼리 친히 좌석을 같이 하여 우리의 활로를 찾아 없으면 아니 되겠다"라고 말하고 4월 19일 70수구를 이끌고 38선을 넘어서 남북협상의 길에 올랐다.

평양에 도착한 백범은 4월 21일에 남북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했는데 5천자에 달하는 긴 문장 가운데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라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잔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서두에서 미·소양군의 한 반도 분점을 통박하고 있었고 현실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민족의 장래를 해안으로 통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끝나는 4월 23일 백범은

38선 때문에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김 우 전
<서울이커메디테이서>

측사에서 "전민족의 유일최대의 과업은 통일독립이다... 공동투쟁 목표는 단선단정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이것을 철저히 방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라고 현재나 미래나, 남이나 북이나 단정을 수립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아놓았던 것이다.

백범은 형식적인 대표자연석회의가 끝나자 남북지도자 영수회담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여 이른바 4월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4월 30일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문제에 충분히 토의한 결과 지도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었다.

- 1) 외군철폐와 민족자존, 자주자결 능력 보유천명
- 2) 내전불발확인고 약속과 담보
- 3) 통일정부 수립방안과 절차

'외군철폐' 이후 이대 제정당사회단체는 공동명의로써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생활의 일체책임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정부는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서명한 단체는 단선결과를 불인정·불지지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제3항은 백범이 영도한 임시정부에서 해방후 9월 3일 공포된 당면정책 14개항 내용과 흡사한 점으로 보아 이 공동성명서는 진정한 쌍수적 합의에 의한 남북협상의 역사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백범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운동을 전개할뿐만 아니라 험난한 역경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언행일치하여 이를 실천하고 남북의 단점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통일을 의지다가 1949년 6월 26일 백주대낮에 육군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조국의 독립과 통일운동의 일생을 끝마친 것이다.

끝으로 백범의 남북협상의 민족사적 의의를 간추려 본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운동선구자"이라는 역사적 업적과 전통을 분단된 조국땅에 거둬내고 약동하게 하여 우리 민족사를 빛나게 했다.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업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하이스리, UBR, SMC물탱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노모름, 리스트롬, 노브롬, 카네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수퍼마, 하모니, 페리오치악, 차밍샴푸, 알로에비누, 풍동 등
- 화장품사업부: 아르도프, 마네르바, 애상스, 헤라나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분산염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의약품사업부: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학부문

- 화성 1사업부: PVC 스테이트 레진, 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화성 2사업부: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성 3사업부: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머틸렌사업부: 선형저밀도 폴리메틸렌, 초저밀도 폴리메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EPOXY)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DPE)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